지역 정책 : 어떻게 해야하나 ?

2012. 9.

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
위원장 홍 철

목 차

Ⅰ 대한민국, 健康한가 ?

Ⅱ 수도권 집중, 解消되고 있는가 ?

Ⅲ 지방보통시민의 幸福한 삶, 어떻게 ?

지방재정, 무엇이 問題인가 ?

귀촌·귀농 活性化, 어떻게 해야하나 ?

지역발전

I 대한민국, 健康한가 ?

자랑스런 대한민국 ! 위대한 한국인 !

- 산업화 성공 : 88서울올림픽 개최
- 민 주 화 : 민주적 정 권 교 체

세계 7번째로 20-50 club 가입

반세기만에 이룩한 大한국인의 쾌거

※ 선진국 : 100~200년 소요

누가 主役을 했나 ?

- 만불 소득 년
  강력한 리더십 故박정희대통령 공무원사회
- 만불 소득 년
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

※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재벌 분리

지역적 : 수도권이 主役 ➡ 한강의 기적

30-50 클럽 진입을 위한 요건

- 개 선진국 년만에 진입성공
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
- 필요조건 지속적 성장
- 충분조건 개발년대 사고 완전불식

개방성, 창의성, 다양성

국가사회 전반 : 혁신요망

대한민국의 당면과제 : 3대 양극화 해소

(1) 빈-부격차 ➡ 분배 (복지)

(2) 대기업-중소기업 격차 ➡ 경제민주화

(3) 수도권-지방 격차 ➡ 지방분권 (지방살리기)

※ 수도권 분산정책 : 한계

한국의 지역 : 무엇이 문제인가 ?

(1) OECD 최고의 수도권 집중국가 ➡ 수도권권력

인구 주택건설 예금은행 대출액

(2) 대표적인 중앙집권국가 ➡ 중앙권력

수도권권력 중앙권력

※ 지방 : 안보인다

Ⅱ 수도권 집중, 解消되고 있는가 ?

개발년대의 지역정책 (60년대~80년대)

- **국가발전정책** ➡ **지역발전**

  산업단지 각종 건설

  ※ 지역정책 개념 **不在**

- **수도권 집중 시작**

 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규제

민주화 · 세계화 시대의 지역정책 (1990년대 이후)

- **민주화**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
  지방의 개발욕구 증대
  ※ 중앙과 지방 지방간 갈등 증폭

- **세계화** 신산업 등 경쟁
  신산업 수도권이 최적지
  ※ 수도권 집중심화

진정한 지역발전정책 : 필요성 제기

참여정부의 지역정책 : 균형발전

- **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**

  세종시 혁신도시 전국 개 건설

- **지역전략산업육성**: 시도별 개씩

  전국에 여개의 각종 센터 설립

  신산업의 지방분산 차원

프랑스 : 지역정책 대전환

- '60년대 이후 수도권(파리)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
  - ➡ 파리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동시 저하
- 2000년대 : 지방분권 및 대도시권 육성정책

  헌법개정 년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다

  국가 지자체 권한 재배분 추진

  대도시 중심의 메트로폴 신설

  그랑파리 및 개 대도시 육성

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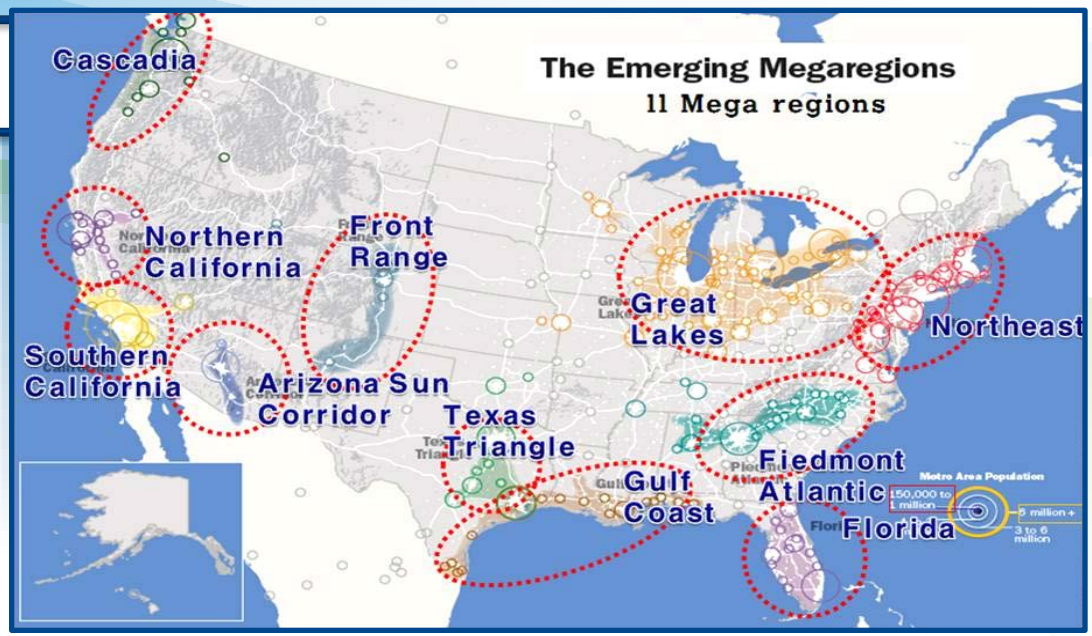
- 광역경제권 세계적 추세
  장기간 소요
- 선도산업 지원 지방 신산업 육성
  내일의 일자리 창출
- 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고속도로 등

광역경제권 : 시작단계

➡ 지속적 정책추진이 요망

미국

- 국가 성장엔진으로 11개 광역경제권 (Mega Region) 구상
  ※ 고속철도로 연결



동북아

- 중국 3개 광역경제권 추진
- 일본 8개 광역지방계획권 → 1개 초광역경제권으로 전환 도모
  ※ 신간센 : 581 km/h로 상향추진

수도권집중 : 심화·확산되고 있다

- 신산업 수도권 집중 ➡ 수도권 집중심화

  연구개발인력 60.3%('02) →

  서비스업 종사자: 49.0%('00) →

- 수도권 확산 충청권 강원도

  충청권 세종시 국제과학벨트

 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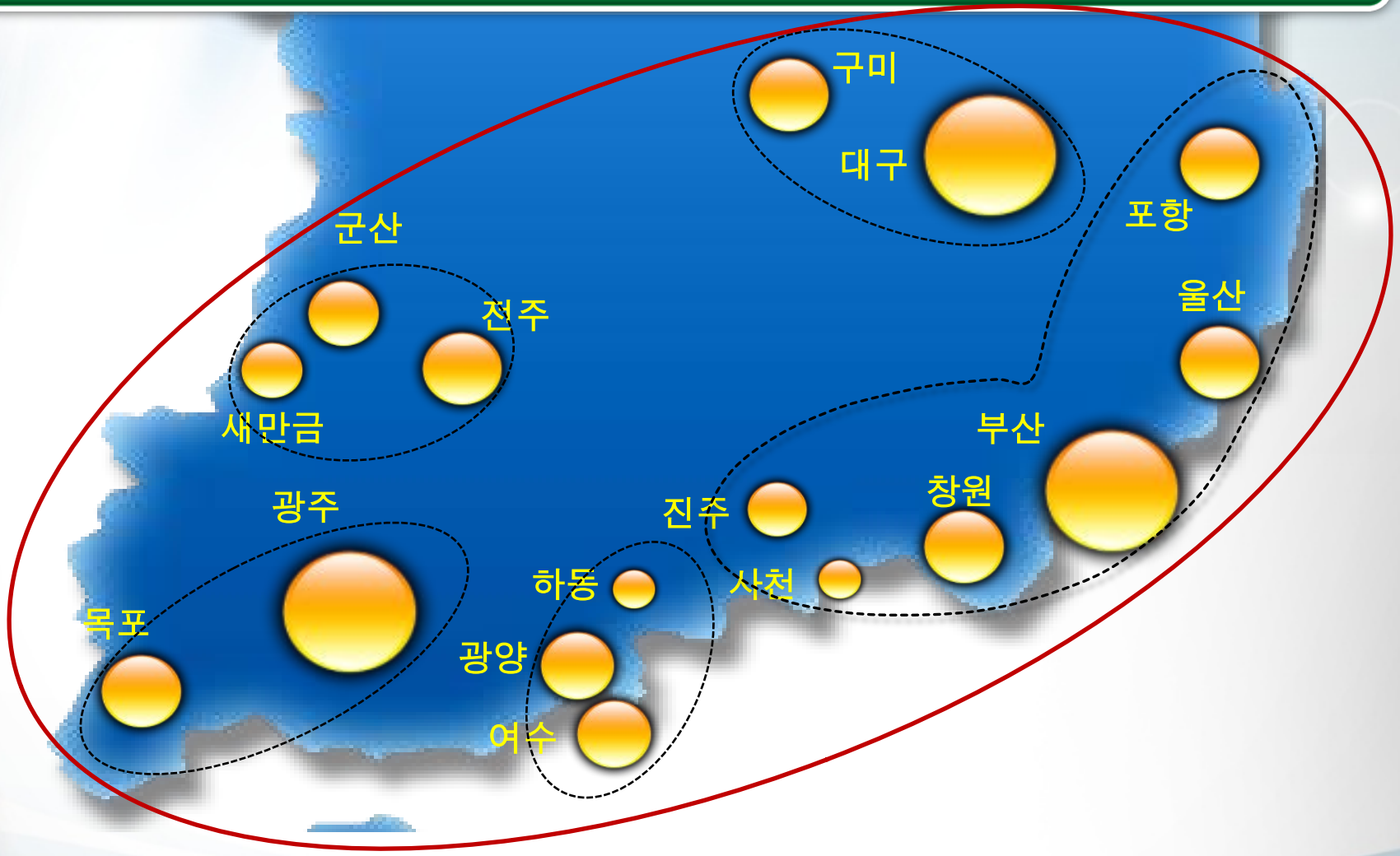
  각종 건설

수도권 ➡ 중부경제권으로 확산

중부경제권 : 10년내 구축 가능

세종시, 2018 평창동계올림픽 : 촉매제

남부경제권 : 소경제권 구축이 우선과제



3+1 광역경제권 ➡ 한반도 경제권

통일 대한민국 :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

Ⅲ 지방보통시민의 幸福한 삶, 어떻게 ?

지방보통시민의 삶

- **개발년대 : 행복했다**

  일자리가 있었다

- **민주화시대 : 행복했다**

  자유와 권리신장　대통령 직접선거

- **2000년대 : 행복한가 ?**

2000년대 : 주요 지역사업들

- 신산업 전략산업 선도산업 센터
- 여수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유치
- 대형 문화 체육시설 건설

SOC, Hardware 위주

지역주민의 '삶의 질' 개선과 거리가 멀다

지방보통시민의 소망 : 소박하다

- 어느 정도의 **품격을 갖춘 일자리**
  아니면 중소기업도 좋다
  ※ 청년실업 신산업을 원한다
- 고액과외 안하고도 **자녀 대학진학** 가능
- **살기 좋은 도시환경**
  노후불량주택 개량 버스타기 편하게
  안전한 밤거리 응급시 종합병원 진료

지역정책방향 : 주민의 '삶의 질' 개선에 촛점

오늘의 일자리 창출 : 최우선 과제

- 지역 신산업 육성 내일을 위한 일자리
- 대기업 외국기업 유치 조건이 맞아야함
  땅값 기술인력 주거환경 등
- **지역 주력 (및 특화) 산업 : 고부가가치화**
  현장 기능인력 공급

지방중소기업청, 지방고용노동청, 지자체, TP 등

통합적 운영 : 지방중소기업육성에 총력

지역 신산업 육성 : 중앙정부 주도

- 국가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

  ※ 지자체 力量 전문인력 재원 不足

- 난립한 각종 특화센터 정리

  많은 기관이 운영난에 직면

  지역대학과 연계방안 강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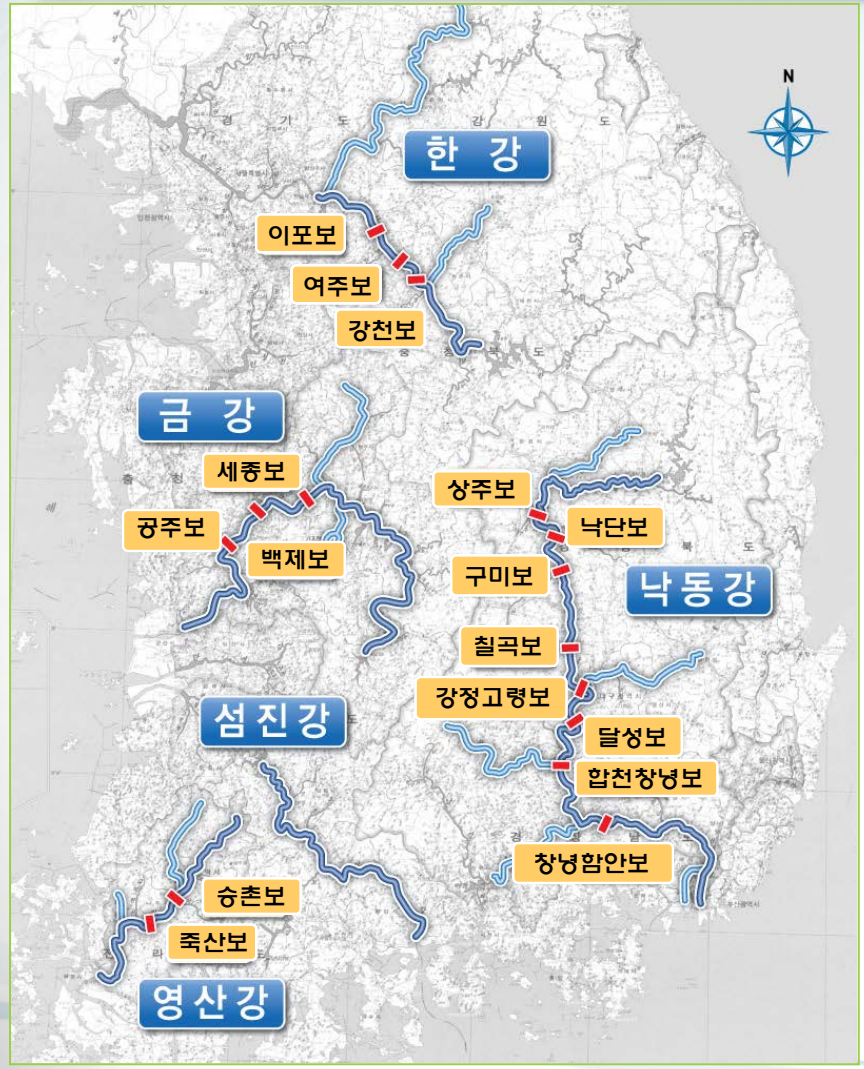
- 선도산업지원단 국가산업정책에 흡수통합

지방교육 육성 : 지역발전의 초석

- 지방 명문고교 육성　유명대학 진학가능
  기숙형 고교 운영 유명학원 강사 초청 예 거창고
- 지방대학 육성　특성화 유도
  지역 주력 산업과 대학간 연계 강화
- 전문대 마이스터고 육성
  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
  ※ 인재의 지역정착 유도

Ⅳ 4대강,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?

물 문제 해결과 강 중심 국토 재창조



- 년 빈도 홍수 방어
  퇴적토 준설 댐 홍수조절지 등
- 억톤 수자원 확보
  다기능 보 댐 저수지 증고 등
- 수질개선과 생태복원
  개 개선사업 습지조성
- 안전한 농업환경조성
  농경지 리모델링 용수확보

지역의 삶과 문화를 위한 공간 창출

- 문화 관광산업을 위한 랜드마크 개보와 경
- 개 생태공원 ㎢ 과 친수공간 확보
- ㎞ 명품 자전거길 국토종주 인증 명
-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작년 10월 개방이후 937만명 방문

달라진 낙동강의 모습 화명지구 수변공원

4대강, 이제는 지역을 위해 활용하자

- 지류지천 정비 안전한 유지관리 등 관심 필요
- 하천 친수공간은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
- 보 붕괴 녹조 등 대강 괴담확산은 자제 필요

지자체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방안 강구

중앙은 지자체 전략에 대해 적극 뒷받침 해야

V 지역정책, 누가 主人인가 ?

지금까지의 지역정책 : 누가 主導 ?

- 중앙정부 기획 감독 **主演**
  중앙공무원 지역인식에 한계
- 지자체 **助演**
  집행기능 예산 따오기
- 정치인 예산따오기의 실질적 **主役**
  인기위주 대형사업 전시성사업

主客이 전도된 지역정책
(권한:중앙정부, 책임:지자체)

앞으로의 지역정책 : 지자체 主人

-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에 애정이 있는
  ➡ 사람 또는 기관 이 주도
- 기초 지자체 **市 · 郡** 가 중심
  區는 광역시가 통합적 관리
  예산배정은 가급적 **市 · 郡** 단위로 배정

- 광역**道** 생활권도 경제권도 아님 ➡ 기능개편
  예 중앙부처의 지방특별행정기관을 **道**로 이관

※ 지방교육청과 기능적 통합

지자체(市·郡) 주도의 지역발전 : 가능할까 ?

- 지자체 입장 지방은 돈이 없다
  공무원 봉급 복지 비용 각종 사업의 매칭펀드
  단체장 선거공약 이행
- 중앙정부 입장 지방은 **力量** 사람 이 없다
  돈 주면 잘 할 수 있는가
  호화청사 경전철 등 예산낭비

지방분권(재정분권), 지방역량 강화

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

지방분권 : 돈, 권한 ➡ 지자체(市·郡)

- 중앙공무원 : 생존의 문제
- 정 치 인 : 각종 국책사업 따오기 용이
- 지 자 체 장 : 잘못하면 괘씸죄
- 지방공무원 : 권한 줘도 골치 아프다
- 시 민 단 체 : 메아리 없는 외침

국회가 초당적 협력

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의 기치를 높여야 !

Ⅵ 지방재정, 무엇이 問題인가 ?

지방재정 세입현황

- **국가예산(235조원, 2011년)**

  세 입 중앙 지방

  세 출 중앙 지방

- **지방재정 세입구성*** **(141조원, 2011년)**

  지방세 외 수입

  지방교부세

  국고보조금

  * 지방채와 조정교부금은 제외한 비율임/ 괄호내는 서울시 포함

지방재정 세출현황

- 경상경비 등 : 20%
- 지자체 자체사업 : 40%
- 국고보조사업(984개) 지출 : 40%(48조원)

  각종 복지사업 부처별 지역사업
  국고보조 조원 지방비 매칭 조원

  ※ 지방교부세(27조원) 66%가 매칭펀드로 지출

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: 지자체예산 블랙홀

국고보조사업 목록(예시)
광특회계 지역계정 부처별(국토부, 농림부, 행안부)

포괄사업명 (주관부처)	실제 운용사례
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(국토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▪ 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촉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 ▪살고싶은 도시만들기(16개 사업)
일반농산어촌 개발 (농식품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▪ 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촉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
특수상황지역 개발 (행안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▪ 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촉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
성장촉진지역 개발 (국토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개촉지구 지원

지방재정개편 : 세출부문(Ⅰ)

- **주민의 '삶의 질' 개선에 우선**

  외형위주의 대규모 행사 또는 사업 지양

  쾌적 안전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에 주력

  기존시설 문화 체육 등 의 활용도 제고

- **지역역량 강화사업**

  지역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

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육성

지방재정개편 : 세출부문 (Ⅱ)

- **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(984개) : 축소**

  ➡ 확보된 재원은 **교부세율 인상**에 활용

  - 복지 등 전국 공통사업 : **차등보조**
  - 비공통사업 : **단계적 지방이관+교부세율 인상**
  - 신규 국고보조 사업 : **최대한 억제**

국고보조사업 : 축소·정비는 재정분권의 출발점

지방재정개편 : 세입부문

부동산 세수감소 및 복지비용증대 : 지방재정 보전필요

대안 Ⅰ 지방소비세율 인상(현행:부가가치세의 5%)

○ 수도권 편중 : 상생발전기금 ➡ 지역간 양극화 완화 한계

대안 Ⅱ 지방교부세율 인상

○ 낙후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 배분 유리

대안 Ⅱ : 현실적 대안임

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 개편(Ⅰ)

- **광특회계 현황**
  - ① 지역계정 각종 지역개발사업
  - ② 광역계정 인재양성사업
  - ③ 제주계정

- **지역계정 : 주민 삶의 질 관련 사업으로 전면개편**
  - 농어촌 마을만들기 도심재생 사업 등으로 통폐합
  - 포괄보조금 개선 시도별 배분 → 시군구별 배분
    市·郡에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

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 개편 (Ⅱ)

- 광역계정 : 지역간 연계협력 , 특화산업지원 위주로 재편
  - 국가 R&D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
  - 다양한 분야의 연계사업 발굴 추진
  - 중소기업 육성, 고용지원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

명칭개정 : 지역균형 및 지역활력증진 특별회계(가칭)

지방재정개편 종합

세 출

- 주민 삶의 질 개선
- 지방역량 강화 초점 : 인력개발, 특화사업지원
- 국고보조사업(984개) 축소

세 입

- 지방재정 보전 : 지방교부세율 인상

Ⅶ 귀촌·귀농 活性化, 어떻게 해야하나?

귀촌·귀농 현상 : Trend化

- 산업화 시대 이농현상 농촌 ➡ 도시
- 세계화 시대 귀촌현상 도시 ➡ 농촌
- 은 퇴 자 베이비부머 세대 만명
- 자연주의자 도시가 싫다 세대

귀촌확산 : (' 01) 880세대 → (' 11) 1만 세대

"이들은 돈도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"

농촌(초고령사회) 공동화 방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

귀촌·귀농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

- 정부는 큰 돈들일 필요가 없다
  각종 정보제공 현지적응 교육실시
  적응기간 년정도 임시 숙소제공
- 귀농인 과학적 신농법 확산
 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망 확충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
- 농산어촌의 창조적 지도자를 육성
 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풀뿌리공동체 육성

농산어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에 기여

Ⅷ 지역발전, Control Tower가 있는가 ?

중앙정부와 지자체 : 역할분담

- **중앙정부**

  지방분권 작성

 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적기공급

  인근 지자체간 연계협력 유도

- **지자체(광역시, 市·郡)**

  지역특화발전 전략수립 추진

  민관 파트너십 구축

지역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강화

- 현 행 :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
  ※ 지역발전위원회 : 단순 대통령 자문기구
- 문제점 : 부처간 **사업중복**, 지자체간 **갈등**

지경부(산업), 행안부(재정세제), 기재부(지역예산)

➡ 통합 : **총괄조정기관** 신설요망

* [대안 1] : 기획재정부 전담부서 신설
* [대안 2] :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로 전환

지역발전정책과 재정의 연계 강화

감사합니다

/대/통/령/직/속/
지역발전위원회